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새누리당 10대 정책

10대 과제	상세 실천과제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턴 경제특구 설치</li> <li>○ 관광산업 활성화</li> <li>○ 해양관광 활성화</li> </ul>
2.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및 개인 발굴·포상</li> <li>○ 2,000억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R&amp;D 사업 신설</li> <li>○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li> <l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li> </ul>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li> <li>○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li> <li>○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li> </ul>
4. 가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li> <li>○ 취약계층(장애인·치매어르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li> <li>○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li> </ul>
5.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li> <li>○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li> <li>○ EBS-2TV 본방송 조기실시</li> <li>○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li> </ul>
6.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li> <li>○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조성</li> <li>○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li> <li>○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li> </ul>
7.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li> <li>○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없는 환경 조성</li> </ul>
8. 공정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li> <li>○ 임금체불 원천봉쇄</li> <li>○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li> <li>○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li> <li>○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 근절</li> </ul>
9. 서민 금융을 보호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li> </ul>
10. 아동이 기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li> </ul>

**(1) U턴 경제특구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는 매년 200~300억 달러 규모로 증가, 해외법인은 매년 2천여개씩 증가,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총 고용인원은 약 281만명(14년) 규모
-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시 내수 부진, 일자리 감소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적극적인 자국 기업 U턴 정책 추진 중
- 최근 차이나 아웃 가속화는 제조업 U턴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해외 현지법인들이 국내로 U턴할 경우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상당한 효과 예상

**□ 목표**

- U턴 경제특구 설치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0% 유턴 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

**□ 이행방법 및 기간**

**1. U턴 전 편안한 국내 정착 유도**

- 전국의 주요 산단 내에 U턴 경제특구 설치
-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
- (세제지원) 철수방식(완전 철수 또는 부분 철수)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법인세·설비수입 관세감면 허용 등의 세제 지원 확대
  -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현행 1~2억원) 2배 확대
  - 향후 대기업이 해외에서 부분 철수 시에도, 중소기업과 동반 U턴 시 지원 확대
- (공장임지) 2~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과 임대기간 종료 시 국내 고용성과 및 지방세 납부실적 등으로 재연장 검토

**2. U턴 후 성공적 국내 정착**

- 유턴 경제구역을 한시적으로 최저 규제지역으로 운영
- 유턴기업 안정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근로 허용

**3. U턴 경제구역을 혁신의 구심점으로 육성**

- 전용 산단에 공동 연구개발이 가능한 R&D 센터 설치
- 취업 희망자 직업훈련 및 재직자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고급인력 양성센터 설치

**□ 자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2) 관광산업 활성화

### □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 관광수지는 메르스 영향 등으로 적자가 60억 9,460만 달러
- K-Pop 등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 매우 열악(1만명 이상 수용 가능 전문공연장 전무)
- 국토의 64%가 산지이고 이중 77%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로 구성, 산림보호 등의 이유로 산지를 관광자원화하지 못하는 상황
- 외국인 관광이 서울과 제주에 편중되어 지역 간 관광산업 불균형 심화
- 지방관광을 위한 교통시스템 미흡
- 관광콘텐츠 부족으로 방한관광객의 주요 활동이 쇼핑에 집중
-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국 중 29위 차지, 자연자원과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미흡 및 값비싼 관광비용

### □ 목표

- 관광활성화로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 □ 이행방법 및 기간

#### 1. 한국만의 경쟁력있는 문화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 (K-POP 아레나 조성 지원)

-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K-POP 본 고장의 명성에 걸맞는 대형 K-POP 아레나 공연장 조성
- 수준 높은 전문공연장에서 정기적인 K-Pop 공연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 장기적으로 대도시에 전문공연장 확보하여 지방관광 활성화

##### (K-Culture Valley 조성 지원)

- 융복합 미디어 콘텐츠와 쇼핑·문화를 아우르는 한류 콘텐츠를 집적하여 한국관광의 랜드마크 구축
- 쇼핑, 음식, 영화, 음악, 패션 등 원스톱 플랫폼 구축

#### 2.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진흥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규제를 합리화 및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추진 근거 마련
- 국립공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을 제외하여 산림훼손 최소화
- 임도를 활용하여 트래킹 코스, 산악자전거길 조성
-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여 스포츠파크, 힐링파크, 친환경농축산 테마체험시설 조성

#### 3.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구축

- (코리아 투어 패스 도입)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철도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통 패스를 도입하고, 관광지 이용과 숙박·음식점 할인 등으로 확대
- (K 트래블 버스 확대) 서울과 지방을 잇는 'K 트래블 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지방관광을 위한 교통편의 제고
- (외국인 전용 관광 앱(App) 제작) 교통정보, 실시간 통역기, 관광지 지도 기능 탑재

#### 4. 기타

- (웰니스 의료관광 전략적 육성) 치료를 위한 환자 유치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증진(건강검진, 한방, K-뷰티, 스파, 찜질방 등) 중심의 관광객 유치
- (특화된 벤처 여행사 육성) 웰니스 의료관광, 유적지 관광, K-Pop 공연 전문 등 특성화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3) 해양관광 활성화

####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레저·관광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여가휴양시설 부족
- 해양레저체험 인프라, 체험·교육프로그램 부족으로 해양관광산업 발전 지체
-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마리나 관광수요도 커지고 있으나 시설 미비와 산업기반 취약

#### □ 목표

-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로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 □ 이행방법 및 기간

##### 1. 권역별 종합해양관광지구 및 해양관광 바닷길 조성

- 권역별 주요 해양관광도시에 요트, 수중관광, 해양레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종합해양관광지구 조성 및 종합해양레포츠 센터 건립, 나아가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
- 주요 도시의 마리나 시설, 수상레저체험장, 해안누리길 등을 연계하여 요트, 카누·카약 등을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바닷길(가칭)' 조성
- \* 요트를 이용한 국토대장정, 해안누리길 종주 이벤트, 해양레저스포츠 철인 3종대회(요트, 카누, 바다수영)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 2. 해양자원 활용한 해양치유(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

- 해양치유 산업화 기반 마련 위한 기초연구 및 해양헬스케어산업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 재활·치유 및 레저관광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헬스케어 시범센터 건립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해양치유 전문지도사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3. 크루즈 산업 활성화 위한 인프라(선박확보, 크루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 국적선사가 고가 크루즈선 매입 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크루즈 펀드 도입 추진
- '20년까지 크루즈 전용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확충하여 크루즈 관광객 수용 여건 대폭 개선

##### 4.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추진

- 거점마리나, 어촌마리나 등 마리나 인프라 지속 확충 및 마리나산업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업 촉진
- 레저선박 전문인력 교육센터, 중고선박 오픈마켓 등을 갖춘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 5.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중레저법」 제정 및 업종 신설, 지역별 수중레저 포인트 발굴 및 수중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수중레저거점 기반조성 추진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1)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및 개인 발굴·포상**

□ **현황 및 문제점**

-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 및 개인들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문화확산 등 창조경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창조경제대상을 포상 중
- 그러나 창조경제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기업, 개인들이 창조경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목표**

- 창조경제 활성화 유도로 미래성장동력 육성 기반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범위 확대, 훈격 상향 조정, 인센티브 강화
- 창조경제 활성화 및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창조경제 대상의 범위 확대, 훈격 상향 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
- (훈격 상향) 현재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훈·포장으로까지 상향 조정, 11점인 시상 개수대폭 확대
- (인센티브) 창조기업에게는 고용창출우수기업 우대지원에 준하는 세액공제,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우선구매 제도 적용, 창조경제인에게는 APEC 기업인 카드에 준하는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출입국 우대 조치 등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인 제공
- (네트워킹) 창조경제 기업과 개인들이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조성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2) 2,000억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2,979개이며 85.7만명 고용 중
- 전체 수출 감소(△8.0%)에도 중견기업의 수출은 오히려 3.2% 증가하였으나 중견기업의 저조한 R&D는 중견기업 대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
- 현재 중소기업 전용의 정부 R&D 지원 사업은 운용( ‘16, 8,532억원)하고 있으나 중견기업 전용의 R&D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이며, 정부 R&D중 중견기업비중이 3.1%로 중소기업(13.7%) 및 대기업(3.9%) 보다 상대적으로 취약

□ **목표**

-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업화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우선 R&D 수요조사( '16년) → 예비타당성 조사( '17년) 등을 거쳐 '18년에 1,000억원 규모로 중견기업 전용 R&D 신설
  - 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2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단계적 확대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3)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증가는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 · 전문 인력 부재 · 정보의 불평형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
-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은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 막대한 경영 차질 초래
- 과거의 특허분쟁은 글로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분쟁대응력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도 특허소송에 노출되어 대책 마련 시급

□ **목표**

- 중소기업의 특허 ·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기반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소송 이외에도 해외 지재권 출원 · 특허전략 수립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
  -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평상시에는 소액의 월별부금을 납입하고, 특허소송 · 심판 ·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비용을 先지원해 주고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
  - 「발명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마련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 □ 현황 및 문제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은 '97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07년에 10년 연장하였으며, '17년 말 일몰 도래 예정
- 그동안 「벤처기업법」을 기반으로 벤처기업 3만개, 매출 천억 벤처출신기업 460개(1조원 이상은 6개)로 증가하면서 벤처기업은 고성장기업의 역할 모델로 자리매김
- 한시적인 「벤처기업법」으로는 벤처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모처럼 맞이한 벤처 재도약의 분위기를 냉각시킬 우려가 있어 「벤처기업법」의 한시조항을 없애고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이 필요

### □ 목표

-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적 법적 기반 마련

### □ 이행방법 및 기간

- '17년 12월 31일까지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몰 조항 폐지
- 시장친화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 개편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벤처캐피탈 등 민간주도로 재설계 등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정책  
순위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1)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의 구직 애로는 제한된 정보, 경험 부족, 금전적인 부담 순으로 나타나, 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보 제공,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청년희망재단에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운영,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에만 설립되어 상대적으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됨

### □ 목표

- 대학 졸업자부터 만34세까지 청년들의 확실한 취업 보장을 위한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 등 지원

### □ 이행방법 및 기간

-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여, 지역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 추진  
(※청년희망펀드 활용방안 검토)



- 청년희망아카데미 내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FCP)\*, 엔지니어링아카데미프로그램(E.A.P)\*\*, K-JOB 프로그램\*\*\* 신규 도입으로 맞춤형 일자리 확대

\* FCP : 신산업 관심 청년 및 우수 중견기업 교육생 대상 미래 역량 교육 실시 및 취업 연계

\*\* E.A.P :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네트워크 內 기업 요청 특화 교육 등 진행 및 취업 연계

\*\*\* K-JOB : 창직 교육, 창직을 기반으로 한 창업 전환 시 스타트업 지원 등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새일센터( '15년 147개소)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재취업한 여성 중 40~50대 여성이 70%를 차지)
- 30대 경력단절여성 등의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확대 및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필요

#### □ **목표**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 **이행방법 및 기간**

- 경력 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운영
- 경력단절여성 채용 수요가 많은 주요 산업별 협회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 부처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강화
- 취업여성의 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신규 제공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3)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증가율('17년 14% → '25년 20%)과 노인 빈곤율(14.4분기 44%) 등을 고려할 때 어르신의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

#### □ 목표

-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 □ 이행방법 및 기간

- '17년~'20년까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 공급 → (' 20년) 78.7만개
  - 고령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 매년 6만개씩 확대, 어르신 민간취업 일자리 매년 3만개씩 확대
  - 어르신의 재능나눔은 매년 1만개씩 확대, 활동 지원기간 연장(현행 6개월→9개월)
- 어르신 채용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 17개 시도에 취업교육센터( '15년 6개소 → ' 16년 8개소, 개소당 50백만원)를 지정하여 맞춤형 직무설계 및 직무 교육 실시
- 모든 시군구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개선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정책  
순위 4

## 가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 (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0년에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였지만, 아직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 존재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등 개선 필요

#### □ 목표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여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완화 및 건보료 형평성을 꾀함

#### □ 이행방법 및 기간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제외

- 평가소득을 없애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없게 되므로 이러한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 (세대당 평균 1만원 내외 인하효과 예상)
- 자동차의 경우 일부 고가의 자동차는 제외 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세대당 약 11,000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효과)
- 서민층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 노력
- 월급 이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과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2) 취약계층(장애인·치매어르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일상생활에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의 정보격차 심화

**□ 목표**

- 취약계층에 대한 전용단말기 보급으로 통신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특화서비스를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

**□ 이행방법 및 기간**

- 전국 17개 광역시·도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만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착용이 간편한 안심 팔찌와 특화서비스(위치확인서비스 등)를 지원
  - 치매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단말기에 내장된 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치매어르신 위치 확인
  - 안심존(Zone)을 설정하여 치매어르신이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줌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3)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나, 현재 저소득 근로자, 청년창업가 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 446만명이 아직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목표**

- 경력단절 전업주부, 청년 취·창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가입기간 5년 밖에 되지 않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5년치 보험료를 추납하면 5,7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구분	종전 가입기간	추납 기간	보험료 총액		연금수령액(20년)	
			종전	추납		
소득	100만원	5년	5년	540만원	540만원	4,293만원
	200만원	5년	5년	1,080만원	1,080만원	5,703만원

**□ 이행방법 및 기간**

- 경력단절 주부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추납을 허용, 446만명에게 국민 연금의 혜택을 더 확대할 예정
- 청년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창업크레딧/취업크레딧 등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창업 크레딧) 18~34세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20% 추가 지원(4.4만명)
  - (취업 크레딧) 18~34세 청년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 시 연금보험료 10% 추가 지원(30만명)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정책  
순위 5**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1)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14년 총 사교육비는 18.2조원,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으나, 1인당 사교육비는 24.2만원,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5.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0.3만원, 0.5만원 상승
- 사교육은 점수위주의 암기식 학습태도를 조장하여 공교육 창의인재 양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

**□ 목표**

- 사교육 부담 경감 및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반 구축

**□ 이행방법 및 기간**

-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 수학, 예체능 교과에 집중 대응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 내에서 흡수할 계획
-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등 학교급 별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
-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 대상으로 수학·영어·예체능 과목 등에 대한 한국 장학재단 주관사업인 대학생 지식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전국으로 확대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2)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K-MOOC에 개설 중인 강좌(27개)의 분야와 수가 적어 다양한 배경과 관심 분야를 가진 학습자의 수요 부응을 위해 개설 강좌 확대 필요
- K-MOOC 강좌 이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부족으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강 유인에 한계가 있음

#### ※ MOOC란 ?

- (개념)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 웹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
- (특징) 교수-학생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피드백 등의 학습관리, 학습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간, 학습자-학습자간 **양방향 학습** 가능

### □ 목표

- 대학의 우수 강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고등교육기회 균형 실현

### □ 이행방법 및 기간

- K-MOOC 개설 강좌를 확대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
    - 개설 강좌수 '15년 현재 10개 대학\*에서 27개 → '16년 1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
    -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공과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 다양한 이수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적극적 수강 유인 제공
    -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 K-MOOC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활용\* 형태 확산
    - \*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Blended Learning),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학습부진·부적응학생 대상 반복학습 등
    - 대학별로 정하는 일정 요건에 따라 학점인정 시범운영으로 학습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
    - 개인 학습자의 자기계발 활용 외에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원 재교육 시, K-MOOC 강좌 활용 확대
- ※ 재직자가 K-MOOC 강좌 이수 시,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받는 방안 추진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3) EBS-2TV 본방송 조기 실시

### □ 현황 및 문제점

- 무료 지상파채널인 EBS-TV(교육방송)는 교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90%이상 편성하고 있어 정작 서민층의 초·중등 교과목 및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를 완화할 학습프로그램이 부족

### □ 목표

- 서민층 사교육비 연간 약1,800억원 절감 효과 기대

## □ 이행방법 및 기간

-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 EBS-TV(교육방송)의 채널을 한 개 더 추가하여
  - 서민층의 초·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간 1,800억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
  - 신규채널(EBS-2TV)의 조기 방송을 위해 방송법령을 개정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 EBS-2TV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 '16년 20억(시범사업용), '17년 40억, '18년 60억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4)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영재교육에 대하여 소외자 없이 개개인이 꿈과 끼를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과학고·영재학교 등에서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비 및 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외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한 맞춤형 정책 부족

### □ 목표

- 소외계층 영재가 창의적이고 큰 인재로 성장할 기회 확대

### □ 이행방법 및 기간

- 영재교육 소외자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 선발 확대
  - ※ 영재교육 소외자 수혜율 : 2.46%('12)→3.81%('15)→5.5%('16)
- 영재교육 소외자 유형별(저소득층, 다문화, 탈북학생, 장애학생 등) 영재 발굴을 위한 맞춤형 선발도구 개발 및 보급
- 표준화된 검사(창의성 검사 등) 선발방식에서 교사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학생을 관찰하여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로 교사 관찰 및 추천제 내실화
  - 체크리스트, 수행관찰 도구 등을 활용한 선발방법 정교화 및 다양한 선발도구의 상호 보완적 활용을 통한 신뢰성 강화
    - ※ 관찰·추천 실시기관 비율 : 81.2%('13) → 83.0%('14) → 90.0%('16) → 100%('17)
- 영재교육 소외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연구 추진 및 과도기적 프로그램\* 지원 확대
  - \* 과학고 사회적 배려자 입학생 학력신장 등을 위한 Bridge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분야별 영재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영재교육 지원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1)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비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심(洞지역)내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범죄 유발,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부족 해소를 위해 유휴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주거 확산 필요
  - 인구 감소로 점차 증가하는 빈집·빈방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축 없이도 잉여 공간 공유를 통해 저렴한 주거 공급 가능
  - 쇠퇴하고 있는 도심 공동체 회복 및 계층 간 교류 확대 효과

### □ 목표

- 빈집을 리모델링 후,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제공

### □ 이행방법 및 기간

- 「도시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활용사업 지원,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
- 빈집을 철거 후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기금 지원을 통해 수리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용 사업 발굴
- 매년 600호 수준의 정비사업 추진

### □ 자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자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2)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

### □ 현황 및 문제점

- 결혼·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필요
-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홀몸어르신 등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필요
  - 홀몸어르신 등의 경우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해서는 주거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

### □ 목표

- 신혼부부 및 저소득·홀몸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

### □ 이행방법 및 기간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전국 확대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 '17년까지 행복주택 건설물량 중, 신혼부부용 투룸을 대폭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양육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도입하는 등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
- 어르신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16년~'17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지속 공급
- \* '16년~'17년 재정과 민간기부금을 공동활용하여 공공실버주택 16개동 공급('16년 11개동 선정하여 추진 중)
- 연간 800호 수준의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3)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 □ **현황 및 문제점**

-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주민자치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사무소가 부과 및 관리
  - 관리비 적정집행 유도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과 지자체 감사 등을 운용 중이나 투명성제고에 한계
- 인건비가 제외된 기형적 입찰방식으로 관리비리 증가
  - 공동주택 단지별로 청소, 경비, 경리 등 관리사무소 직원 수가 달라 적정한 관리인력 기준 필요
- 현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의무관리대상(30세대 이상으로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국토부의 「주택법」 일부 규정 이외에 주로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아 관리가 이원화된 상태
- 세부적이지 않은 「집합건물법」 규정으로 대부분 자율적인 운영체제에 머물고 있어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및 입주민 분쟁과 불만 초래

#### □ **목표**

- 관리비 산정을 투명하게 하고,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다른 유사단지의 관리비 수준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관리비 분쟁해소 및 인하 유도
-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소규모 아파트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관리비 분쟁 감축

#### □ **이행방법 및 기간**

- 입찰 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유도
- 공동주택 관리비 빅데이터를 이용, 관리비의 적정부과 및 관리여부를 검증하여 적정집행을 유도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비리요인 사전 차단
  - '17년부터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리비의 적정집행과 투명성 확보
- 비의무관리대상(약 360만세대, 전국 1,210만세대 중 약 30%)에 대해서도 의무관리대상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 중
  - 관리비 내역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동대표 교육이수 등을 의무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
  -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기준과 주택관리사 인정 관리실적 기준인 50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관리비 내역고지 및 공개 의무화(30세대 이상은 권고)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의 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비 공개 항목 수 등 결정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4)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에 불과하며( '15.4월 기준), 대학가 주변의 원룸,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여전히 열악
- 국·공유지 부지에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또는 민간기부금을 통해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추진 중\*이나 수요에 비해 부족
- \* 4개 사업(서울2, 경기1, 부산1) 3,766명 수용규모

### □ 목표

-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로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 □ 이행방법 및 기간

-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
  -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추진(지역별 기숙사 수요 분석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건립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
- \* 건립비 전액 국고 지원시, 국립대 기숙사비 수준인 월 15만원(2인실 1인당)으로 공급 가능  
→ 공공기금으로 건립하는 기숙사(월24만원) 대비 약 60% 수준이며, 사립대 민자기숙사(월31만원) 대비 약 50% 수준

### □ 자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자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정책  
순위 7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 (1)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 □ 현황 및 문제점

- '15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614만명 중 21.5%에 달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 자영업자 평균 월매출은 '10년 990만원에서 '13년 877만원 수준으로 하락, 최근까지도 유사한 양상
- 전반적인 경기하락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연령층의 자영업 진입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로 경영여건이 악화
- 지난해 76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큰 어려움 존재

### □ 목표

-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자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화



## □ 이행방법 및 기간

-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도 완화
  - 현재 자영업자 대상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해, 7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인상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현재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5~30% 차등 감면율 적용)
  - 현재 국세청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대비 110% 이상 신고한 소규모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장수 자영업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완화
-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이 유예되는 기준 대폭 완화
  - 현재 재창업자금을 용자받고, 체납횟수, 매출액, 체납액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3년간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는 바, 적용대상이 늘어나도록 매출액기준(10억원 미만→30억원 미만) 및 체납액기준(3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을 완화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현재 연 3회미만 체납, 매출 10억원 미만, 체납액 3천만원 미만자 적용)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2)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없는 환경 조성

### □ 현황 및 문제점

- 대형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입, 구도심 상권 침체 등에 따른 서민상권 쇠퇴로 영세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상황
  - 상인들의 노력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상권 활성화에 공헌한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
- 구도심 상권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에 따른 상권활성화 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부재

### □ 목표

-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와 도심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 이행방법 및 기간

- 「자율상권법」 제정을 통해 상권의 주체(임대인·상인 등)들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조직, 상권을 관리·육성하도록 하고
  -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계약 특례조항(계약 갱신요구 5년→10년)을 마련하여 상인 영업권 보호
- 상권회복 요구가 절실하고 자구노력이 확고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선별,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20년까지 자율상권 선도구역 40곳 육성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1)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상대적으로 해외유학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여 국비유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수혜인원 확대 및 해외유학 비용 증가에 따른 장학금액 현실화 필요
-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비유학 및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격 충족 적격자 부족과 CEO의 추천 저조로 실적 저조

□ **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국비유학 기회 확대로 사회적 기회균등 실현

□ **이행방법 및 기간**

- 예산 추가확보(100억), 지원 자격 및 선발기준 조정을 통해 학업성과 수학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국비유학생 선발기회 확대
- 석·박사 취득 기간 동안 약 2, 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
  -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16년 8명 선발 → ‘17년 50명 선발
- 현실적 제약이 다소 많은 장기 유학 지원과 병행하여 단일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단기 국비유학 과정을 개설하여 수요 활성화 견인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2) 임금체불 원천 봉쇄**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이후 매년 임금체불 금액은 1조 2~3천억원 발생, 체불 근로자는 약 27~29만명 수준 (단위 : 천명, 억 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근로자수	276	279	285	267	293	293 (+1.1%)
금 액	11,630	10,874	11,772	11,930	13,195	12,993 (-1.5%)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많이 발생하며 규모로는 100인 미만 (1,241억, 269천명)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이 87.5% (단위 : 억 원)

구 분	전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 및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 업	기타
2014	1,319	4,047	3,031	1,603	1,422	1,290	1,802
2015	1,299 (▽1.5)	4,750 (△17.4)	2,488 (▽17.9)	1,740 (△8.6)	1,286 (▽9.6)	1,078 (▽16.5)	1,651 (▽8.4)

- 임금체불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폐습이자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부담
- 특히, 100인 미만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심각

□ **목표**

- 임금체불 원천 봉쇄로 근로약자 보호

□ **이행방법 및 기간**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
  - \* 근로기준법 : 부가금제(법원 판결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액 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지연 이자제 확대(퇴직 + 재직근로자),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여 등 추진
  -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2천만 이하 과태료)
-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확대 추진
  - 노무관리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장이 법위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3)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 **현황 및 문제점**

- (사례) 감사원이 2015년 1~7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公)기관 47곳을 감사한 결과, 14곳에서 인사 비리가 적발됨

·부산○○공사 :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사내외 청탁을 받아 7급 계약직 3명을 특별채용한 뒤 1년 후 정규직 등으로 전환시킴  
 ·한국○○○○진흥원 :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공고 후 지원자 65명을 전원 불합격  
 ·○○○공사 : 직원을 통해 입사신청 받은 뒤 '12~'14년 504명을 면접만으로 특채

-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근절 필요

□ **목표**

- 인사청탁 근절로 기회의 균등 및 공정성 실현

□ **이행방법 및 기간**

- 해당 기관 메인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자 정보(이름, 직책 등) 및 위반내용 공개
- 관련 법 개정으로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4)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지자체·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요 물자 등의 구매에 따른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만 「국가계약법」 의무적용 및 조달청 의무위탁대상으로 한 결과, 자체발주 계약의 경우 자의적 집행에 따른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제기

\* 「국가계약법」 의무적용대상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자산1,000억원 이상이며 예산 500억원 이상, 현재 200개중 65개만 해당)

\*\*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 (국가) 물품·용역 1억원 이상, 공사 30억원 이상 계약, (지자체) 물품 단가계약, (공공기관) 2.1억원 이상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지자체, 지방공기업은 '06년 1월, 개별 지자체 특성 반영을 위해 「지방계약법」 제정

### □ 목표

-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계약법」 적용 확대,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발주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이행방법 및 기간

- 자의적인 계약 집행소지가 없도록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 자산 1,000억원 이상이면서 예산 500억원 이상(65개) → 예산 250억원 이상(123개)
  -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
-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청 의무위탁대상 확대
  - 공공기관의 사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형화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무위탁 하도록 하여 유착관계 등을 이용한 계약비리 차단(의무위탁대상 : 2.1억원이상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단가계약\*\* 등 추가)
  - \*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 \*\* 단가계약 :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정형화된 물품(예: 컴퓨터, 차량, 복사기 등에 대해 조달청이 조건에 맞는 업체를 지정하고 단가에 관한 계약을 하면, 수요기관이 지정업체에 구매물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계약방식)

### □ 자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자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5)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 근절

### □ 현황 및 문제점

- 서민경제 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여만 개로 골목상권을 형성. 그동안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가맹점주 권리보호 대책 등 법 집행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 및 불공정행위 개선 등 현장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

< 가맹사업법관련 사건접수 및 조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사건접수	경고이상 조치
2013년	263	74
2014년	267	70
2015년	367	117

## □ 목표

- 가맹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법 위반 예방효과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법 집행체계의 추가적 개선 조치

## □ 이행방법 및 기간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부당하게 거래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
  - 징벌적 배상금액의 상한은 현행 「하도급법」 규정 고려, 3배 이내 규정
    - ※ 현재 「하도급법」(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대리점법」 도입(2015년)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정책  
순위 9

# 서민 금융을 보호하겠습니다!

##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시장금리가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는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특히 민간 금융회사별로 개인신용 대출금리가 양극화되는 현상 지속)
-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으로 금융수요자인 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종합적 금융서비스(대출, 채무조정, 취업알선 등) 지원체계가 미비
- 국내경기부진으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의 대출이자 상환부담 상승, 자금조달 어려움 지속

## □ 목표

- 서민대상 저금리 상품 출시, 원스톱 금융서비스로 서민의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 이행방법 및 기간

- 인터넷 전문은행(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이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등으로 기존 금융권 이용이 원활치 못했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
  - 향후 3년간 1.4조원대의 10%대 중금리 상품 공급
- 자금지원, 금융·취업상담, 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기존의 휴면예금재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통합)
-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강화
  - 채무자의 최소생활비 보장을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액을 최소 180만원(현행 150만원)으로 확대
  - 연체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대출만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16년 상반기 중 실시)
  - 신복위 워크아웃 추진 시 상각채권 원금감면율을 최대 50→60%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70→90%로 확대(‘16년 상반기 중 실시)

- 신속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하여 대부업체 등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참여 확대
-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을 설치하고 파산절차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과 연계 강화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정책  
순위 10**

**아동이 기벌 수 있는 세상, 새누리가 만들겠습니다!**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학대 신고는 '12년 10,943건 → '13년 13,076건 → '14년 17,791건 → '15년 18,97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
- 우리나라의 '1천명당 피해아동 발견율' 은 1.1명 수준으로 미국(9.1명), 호주(17.6명)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웃과 학교의 무관심, 병원·경찰 등 관계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

□ **목 표**

-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 출결석 상황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중심의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및 아동치료병원 지정·운영
- 예비부부부터 출산, 학부모까지 단계별 학부모 교육 체계적 지원
-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선진국 수준 확보(총예산 대비 0.0047% → 0.1% 수준)
-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이행방법 및 기간**

- **(아동복지진흥원)** 응급전화응대, 외부기관협력, 아동학대 관련 연구진행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갖추고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권리옹호 전담부서를 보건복지 산하 기구로 설립
  -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활동 및 관련 정책 수립
-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기존에 설치된 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하고 지역 내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신속 연계
  - 교사의 학대의심 및 아동 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
  - 지역 내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학대트라우마에 대한 교육
  - 학대트라우마 치료 및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및 매뉴얼 개발 등
-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규인력 충원을 통해 기존 '가정폭력전담경찰관' 과 통합하여 '학대전담경찰관' (APO) 으로 운영하면서 가정폭력 업무와 함께 향후 아동·노인·장애인 업무까지 전담
  - '17년까지 여성청소년업무 중심을 ① SPO(학교전담경찰관), ② APO(학대전담경찰관) 양대전담체계와 ③ 여성청소년수사팀 3각 체제로 정립,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효율적 대응

- (아동치료병원 지정·운영) 기존 국립대학병원 인프라 활용 통해 소아과 및 소아정신과를 중심으로 한 아동 친화적 환경 속에서 같이 거주하며 중장기적 집중 심리치료 및 학교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지정·운영
- (단계별 학부모 교육) 예비부부, 출생신고 및 출산 전후, 자녀 연령의 단계별 부모교육이 실시되어 점진적으로 부모 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법제·개정) 「피해아동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등 개정
  - (아동학대예방 관련) 아동학대예방 및 지원종합계획 수립,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 운영,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포, 신고의무자 교육 등
  -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관련)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관련 피해아동 취학지원, 법률상담지원, 피해아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입·퇴소 절차,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등
  - (아동학대 대응 관련) 학대후유증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 정서지원을 위한 명령 추가, 법원이 부모 또는 가족,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필요 시, 심리 정서 치료를 명하는 명령 추가 등의 개정 필요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3p 참조

※ 별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자원 조달 방안**

□ 소요예산 및 기본방향

-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 소요예산은 4년간( '17~ '20) 4.3조원으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정상적인 세입구조 내에서 총선공약 소요자원 흡수

□ 자원충당 방안

- 연도별 예산증가분 활용 : 4.4조원 (연 1.1조원)
  - 연평균 예산증가규모가 정부의 중기재정지출 계획상 약 10조원인 점을 감안
  - 이 중 약 10%인 1.1조원 활용

※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지출	355.8	375.4	384.7	386.7	396.7	406.2	416.0	2.6
(증가율)	(4.0)	(5.5)	(8.1)	(3.0)	(2.6)	(2.6)	(2.6)	
(증가분)					10	9.5	9.8	